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 바란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선임연구위원
2019.02.26.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말이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회담 결과를 포장해 내는 외교적 수사(rhetoric)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결과 미국의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등이 합의될 것이다.

양 정상은 엄청난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겠지만, 이런 속도라면 미공개 농축우라늄시설, 핵물질과 핵무기의 신고·검증·폐기에 10 년도 더 걸린다. 그사이 미국과 한국의 국내 정치적 변화가 있다면 협상은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수사적 수준을 넘어 진정한 평화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검증·폐기가 합의되어야 한다. 현재 비핵화 협상은 고인 상태다. 당초 핵능력의 동결 및 신고, 의심시설 방문 및 시료 채취를 포함한 과학적 검증, 핵능력 폐기의 3 단계로 협상을 진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방식을 거절했다. 그 대신 핵능력을 각각 따로 떼어 협상하는 단계적 방식을 주장했고 특유의 버티기를 통해 관철해냈다. 그 결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영변 플러스알파’를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먼저 논의하고 진전이 있으면 그 이상을 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의 출발점은 영변 핵시설이다.

과거 6자회담 당시 북한은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생산시설의 동결 및 불능화를 수용한 바 있다. 10 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아니다. 그간 고도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진전이 필요하다. 그것은 영변 농축우라늄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체의 신고·검증·폐기이며, 특히 의심시설 방문 및 시료 채취를 포함한 검증이 핵심 관건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순 참관을 수용한다면 핵물질을 추적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담겨야 한다. 상응조치로서는 금강산 관광이 추가될 수 있다.

당초의 낮은 기대를 깨고 미·북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넘어서는 '플러스알파'까지 합의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다만 이 역시 우리의 국익이 반영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끝내 보유하고자 한다면 핵능력은 동결 수준으로 합의하는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타결하려 들 수 있다. 본토 안전을 중시하는 미국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고 상응조치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합의해 준다면 비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북·중 간 합작사업도 재가동된다. 동북 3 성 주민들의 빚발치는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이 북·중 간 합작사업 단속을 점차 완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재 이행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열리면 북한은 사실상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얻어내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플러스알파'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닌 전체 핵 활동의 동결이나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의 신고·검증, 또는 비핵화 로드맵 합의와 같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여야 한다. 이 정도면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상응조치로서 개성공단 재가동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한다. 거란의 침입에 맞선 고려의 외교관 서희가 강동 6 주를 돌려받은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교섭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그만큼 미·북 양측의 창의적 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모두 우리에게 득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신기원을 이룰 역사적 합의를 기대하지만, 혹여나 우리의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한미 공조 원칙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 본 글은 2월 25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